

시장과 계획, 자율과 조정의 조화를 찾아서

박노영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 개혁과 구조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논리가 투명하게 작용하게 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성향의 주장들이 관련 담론을 지배하고 있다. 경쟁력의 강화와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 항상 그 뒤를 잇게 된다. 이 글에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논리, 경쟁력, 효율성 등이 과거에 비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원론적인 수준에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먼저 신자유주의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으로 유포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시장논리, 경쟁력, 효율성 등의 존중이 신자유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케인즈 주의에 바탕을 두는 유럽형의 복지국가들과 심지어 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경쟁력과 효율성은 나름대로 강조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단순히 시장논리, 경쟁력, 효율성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물신시하고 그것들을 위해 반복지, 반노동자적 정책을 내세운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세계를 무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논리이고, 독점 규제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독점자본의 논리이고,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와 세금, 그리고 임금을 줄이고자 하는 자본 일반의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황과 전쟁으로,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계급적, 민족적 불평등으로 얼룩져 온 세계 자본주의의 해묵은 역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신자유주의가 약속하는 문명이라는 것이 대단히 야만적일 것임을 감지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담론으로 유포되게 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다른 많은 나라들은 바로 지금도 시장과 계획의 중간 어디쯤에서 자기네들의 실정에 맞는 최적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개혁과 구조조정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자. 우리의 종래 시스템에서 시장논리니 경제적 합리성이니 하는 것들의 작용을 굴절시켜 온 것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뒤얽힌 연고주의, 재벌에 의한 산업 및 금융의 독점과 부당 내부 거래, 경영 불투명성,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 같은 것들이다. 이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요구는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 상당 정도 친화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신자유주의의 요구이기 이전에 사회 정의와 관련되는 훨씬 보편적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그런 방향으로의 개혁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요란하게 전과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기 이전에 보편적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그런 방향으로의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바, 이는 현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가질 수도 있을 일부 긍정적인 측면마저도 살리지 못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담론을 희화화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독점 규제의 관계는 좀 미묘하다. 1930년대 유럽에서 나타났던 신자유주의가 시장 원리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 규제를 요구했다면(바로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1970년대 말에 득세하기 시작한 영·미형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독점을 옹호하게 될 탈규제와 무한 경쟁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신자유주의 담론은 주로 후자의 그것이다. 독점재벌 체제의 폐단을 해소하자는 것이 부인할 길 없는 국민적 여망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 정도의 개입과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재벌 개혁을 (재벌의) 자율과 (재벌이 지배하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재벌과 보수 정치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의 주장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여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이 보인다.

여타의 정부 규제들도 일방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요컨대 시장 상황에의 탄력적 적응을 방해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많은 경우 부정부패와 연루되기 쉬운 번문옥례)는 물론 대폭 철폐되거나 간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과 인권과 복지과 민생에 관련되는 규제들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두거니와, 이 이야기는 결코 시장논리, 경쟁력, 효율성 등의 중요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들은 상당 정도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그것들이 '실제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들의 중요성의 인정이 신자유주의적 극단에 이르는 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결코 시장과 소위 자율(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자율)에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시장과 계획의 조화, 자율과 조정의 조화의 추구가 신자유주의 담론의 흐름에 익사해 버려서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할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백년대계'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다. ♣

박노영/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현대 세계체제 내에서의 신용공업국 발전에 관한 범주적 해명』, 『북한과 통일문제』(공저),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공역) 등이 있고, "이성적 합리성과 현실적 이성을 위하여", "세계체제의 변화와 한국통일"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